

尹 정부 2년차 정기국회... 與野, 민생 소생활 입법마련 격돌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치러 국정감사, 내달 10일~27일 실시
국민의힘 우주항공청 설치법 추진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처리 집중 예정
더불어민주당 7대 입법 과제 선정
 1특검+4국정조사로 협치 미지수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2년차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주요 입법·예산을 심사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당들이 민생을 위한 진검승부를 위한 막판 준비에 열중이다.

이번 제410회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치러진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월 20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맡는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다음 달 31일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 성장의 발판을 놓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추진하고, 첨단산업에 인재를 육성할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민생투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로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교원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소상공인보호법·지역사랑상품권법·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을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정권 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민간경제가 위축되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학생도 아는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고, 이 불황 속에 초보자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 탓하고 서민과 청년 지원 예산을 깎아 버리면 이 나라 경제 대체 어찌되겠나"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시간'이라고 평가받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특검+4국정조사'를 띄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띄우면서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특검+4국정조사'는 고채상병사건에 대해선 특검을 실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 모두 여당과의 합의 혹은 협조가 없으면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1 특검 4 국정조사,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 일방적인 국회 운영 등 그동안의 폭주를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런던협약 86개국에 친서 발송... "오염수, 협약·의정서 위반 돼"

런던협약·의정서 발송 기자회견
 투기 중단 위한 국제 여론 환기
 오늘 국회서 국제 공동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고 전 세계인들에게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천막 앞에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런던협약의 공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공업국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해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

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이다.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 같은, 협약에 인용된 그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의정

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저는 런던협약 86개 당사국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한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 여론 환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것은 고작 열흘이지만 그 피해는 앞으로 수백 수천년 간 누적돼서 남을 것"이라며 "오염수 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다. 거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협약 위반에 대해 당당하게 제소하라"

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4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원전 오염수 국제회의엔 미국 측 패널로 조셉 벅슨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참여포럼(KAPAC) 대표, 중국 측 패널로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참여한다.

패널들은 회의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및 연대 외연확대'를 골자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한다. /박태홍 기자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與, 이재명 단식·野 장외투쟁 맞서 '민생 투어'로 차별화

매주 민생버스 타고 현장 방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맞서 '민생 투어'를 통해 차별화에 나선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매주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은 물론, 경제·산업·노동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도 추진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는 '민생 투어'를 통해 경제, 산업, 노동 현장에 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직접 살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생 여당, 경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지도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매주 1~2회 민생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게 계획이다. 김 대표의 첫 민생 투어 일정은 1박 2일 일정으로 경제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며 추석을 앞두고 서울과 용노동청 방문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투어 일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려는 의지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산업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김 대표의 첫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라며 "추석 대목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걱정 없도록 하겠다. 그 외에 경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1일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민생 회복을 위한 7대 중점 운영방안 및 4대 중점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유튜버 상위 1%, 전체 25% 수입 가져가"

한병도 의원, "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유튜버의 수입이 2년 새 약 10배 올랐으나, 상위 1%가 전체의 25%를 가져가는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의 수입이 8598억원이었고, 상위 1%의 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했다.

지난 2년 새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1110만원, 2020년 4520억8100만원, 2021년 8588억9800만원이었다.

신고인원 또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늘

어났다. 국세청은 2019년 9월 유튜브 열풍에 발맞춰 '1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소득 상위 1%의 수입금액은 2021년에 2438억6500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7억 13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도 2020년 71개에서 2022년 870개로 크게 늘었다. 수입금액도 2020년 323억원에서 2022년 355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